

의안 번호	1626	【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. 5. 1.(금)
- 나. 제 출 자 : 노세영 의원 외 6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5. 1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5. 11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노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, 신고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,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(안 제28조제2항)
- 신고 변경사항은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5일내 보완(안 제28조제3항)
-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(안 제28조제5항)
-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 의무사항 변경(안 제32조제3항)
- 조문 정비(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, 안 제36조제2호, 안 제40조제1항 제2호, 안 제41조제4항)

다. 근거법규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

-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

제1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미경)

- 의안번호 제1626호,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이 2020. 5.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9. 10. 17.] [법률 제16324호, 2019. 4. 16., 타법개정]

- 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**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"외부강의등"이라 한다)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. 11. 26.>
- ③ 삭제 <2019. 11. 26.>
-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1. 26.>
-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,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[시행일 : 2020. 5. 27.]

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

[시행 2020. 5. 27.] [대통령령 제30608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- 제1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**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"외부강의등"이라 한다)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4. 7.>
- ③ 삭제 <2020. 4. 7.>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4. 7.>
- ⑤ ~ ⑧ (현행과 같음) [전문개정 2016. 9. 27.] [시행일 : 2020. 5. 27.]

- 제19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)**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1.>
-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